

위험수위 넘어선 大學教育의 危機

孫 浩 哲

(全南大 政治外交學科)

農者天下之大本이란 말이 있다. 식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농사가 천하의 근본이라면 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농사라 할 수 있는 사람농사, 즉 교육은 천하의 근본 중의 근본이라는 의미에서 敎育天下之大大本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에 의한 일종의 ‘교육입국’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경우 이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특히 大學教育은 현재 미증유의 위기에 처해 있다.

잘 알려지 듯이 司正 정국 속에서 노정된 대학들의 부정입학, 교수적 매매파동, 대학학력고사 관리위원들의 답안지 유출파동, 게다가 부정입학 관련자의 축소발표 물의 등으로 대학교육과 대학교육 당사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어 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교육부·학교 등 교육관계자’가 경찰, 검찰, 군, 일반공무원, 언론인 등을 제치고 정치인, 세무공무원에 이어 앞으로 사정을 더욱 강화해야 할 대상으로 국민들에 의해 지목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이를 웅변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다.

이에 못지 않게 심각하면서도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학교육 위기의 또 다른 측면은 大學의 就業學院化 현상이다. 현존사회주의의 몰락과 우리 사회의 보수화에 따른 이념의 쇠퇴, 개인주의적 성향의 ‘신세대’의 대학 구성원화, 경기침체에 따른 취업난 등에 따라 대학생들은 저학년부터 살벌한 취업준비 경쟁화되고 있다. 특히 이에 따라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대부분의 정규 대학교육(특히 순수과학쪽의)은 취업요건 중의 또 다른 구성부문을 차지하는 학점관리를 위한 ‘필요악’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같은 학점관리를 정규교육과 별도의 취업용 공부라는 대학교육의 二重化 현상이 야기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대학을 단순한 학문연마의 장으로 남아 있지 못하도록 만들어온 우리 사회의 특수성에서 연유한 대학에 있어서의 ‘이념의 파임’을 정정하는 효과가 있다. 또 대학의 기능 중의 하나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고급기능적’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현실이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입시위주의 기능주의적 교육 일변도로 몰려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유일하게 비판적 사고와 인본주의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마저도

이같은 機能主義的 敎育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 때 사회 전체의 비판적 사고의 마비 등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의 대학교육은 위기를 전회시켜 새롭게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립대학 부정입학문제의 경우, 이것이 사학의 재정난 등 구조적 원인으로부터 대학을 개인적 처부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일부 악덕재단, 이들의 전횡을 용인하는 반민주적 제도, 이에 영합하는 출세지향적 보직교수들의 복합적 결과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이번의 부정입학 파동이 사학의 재정난 해소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시도되다가 여론의 반대로 일단 좌초된 기부금입학제를 정당화시키고 도입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계급사회에서 교육은 계급적 신분상승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러해 왔다. 또 그동안 사회경제적 조건을 초월한 높은 교육열 덕분에 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계급적 대립의 '均衡者' 구실을 해왔다는 점에서, 교육기회까지도 사회경제적 조건에 종속시키는 기부금입학제는 어떠한 이유로도, 특히 체제유지 차원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해결책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즉, 교육세의 상당부분이 체제유지비로 전용되어 사용되어야 할 정도로 사회복지와 교육투자 면에서 국제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러온 과거의 체제와 달리 문민정부는 그 문민성에 걸맞게 교육예산을 대폭 확대시키는 한편,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대학교육의 비용을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국가가 과감하게 지원하여 고급인력 재생산비용을 社會化시켜 나가야 한다.

두번째로 부정입학처리 등 재단의 전횡이 가능토록 6공하에서 개악된 私立學校法은 재단으로부터 교권과 대학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민주적 내용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공개행정', '책임행정',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大學 運營制度의 革新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사실 사회의 다른 조직에 대해 선진적이어야 할 대학이 더 낙후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 때 유행했던 '사회성격논쟁'을 빌리자면, 우리 사회가 반봉건사회라는, 현실과 맞지 않는 '식민지반봉건사회론'이 그나마 맞는 곳을 들라면 대학이 아닐까 하는 자조마저 든다. 즉, 다른 분야는 그래도 경쟁의 법칙도 적용되고 물질 기반도 어느 정도 갖춘 '국가독점 자본주의' 라면 대학은 그것도 못 갖춘 '반봉건사회'는 아닌지?

대학교육의 機能主義化 문제 역시 그 장기적 폐해 등을 기업 등에 실득시킴으로써 대학 성적과 별도의 취업시험이라는 이중 취업기준을 대학성적으로 일원화시키거나, 취업시험 자체를 기능주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개선시키는 방안 등 대학이 주도권을 갖고 적극적인 타개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